혈세 투입 새마을회관 건립 '특혜 시비'

서·북구 회관 건립에 시·구청 20억 지원…형평성 논란

새마을회 소유권 요구에 구청 법률 검토 나서 배경 의문

광주시와 서구청, 북구청이 '새마을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혈세 20억원을 포함 총 30억원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복지예산 증가로 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의 적절성 시비가, 타 단체와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특히 서구 새마을회와 북구 새마을회는 건립 후 회관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광주시 새마을회와 서구 새마을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2017년까지 서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새마을회 자부담 5억원 규모다.

서구 새마을회는 새마을회관과 관련해 대지 300㎡, 건축 연면적 700㎡,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뒤 자신들에게 제공하면 사무실, 회원 및 봉사자 교육장,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새마을회는 현재 옛 양동주민센터 건물 2층 126㎡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구도 북구 새마을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구와 동일한 사업비를 들여 2017년까지 북구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구와 북구는 회관용 건물을 매입한 뒤 사용권은 물론 소유권도 넘겨달라는 새마을회의 요구를 받고 타 자치단체 건립 사례를 살피면서, 자칫 불거질지 모를 불법 양여 시비를 피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구는 특히 구유재산 등재를 위해 새마을회관 건립을 시비와 구비로만 충당하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마을회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힌데다 시비 5억원도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마을회 측 안을 수용, 최근 광주시에 새마을회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새마을회 시·구 회장단 건의를 받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광주시에 내년도 예산에 회관건립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새마을회관으로 쓰려고 건물을 매입할 경우 소유권을 넘길지 구유재산으로 둘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전국 18개 시도를 기반으로 한 지부 성격의 광주시 새마을회가 회관을 두고 있으나 자치구를 기반으로 둔 지회의 새마을회관은 현재 없다. 광주 남구 새마을회와 광산구 새마을회가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광주시 새마을회와 서구·북구 새마을회는 올 초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회관 건립을 건의했고, 지난 9월 자치구 상생회의(부구청장 정례회의)에서 다시 회관 건립을 건의했다.

새마을회 주요 사업으로는 내 집앞 쓸기 운동,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누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 각종 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양농협, 노조원 불법도청 논란

노조 녹취록 확보…농협중앙회 파업 무력화 개입 정황도

광양농협, 녹음기 설치 시인

광양농협이 파업 중인 광양농협 노동조합을 '불법도청'하고,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일부러 계약직을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농협은 노조 동의없이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농협중앙회가 광양농협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지부는 16일 "농협중앙회와 광양농협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불법도청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 조합장이 지난달 29일 광양농협 이사회에서 한 노조탄압 발언과 경영진이 지난 5일 노사의 단체 교섭이 진행된 2층 회의실 옆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을 불법도청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조합장이 신임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대비해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를 통해 일부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노조 가입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재계약 거부 방침에 대해 밝힌 내용이 담겼다.

또 광양농협이 농협중앙회 소속 노무사에게 하루 2차례 노사 동향을 보고하고, 노무사의 해석에 따라 대응해 온 광양농협 경영진의 발언도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광양농협이 노조에 가입한 자녀를 둔 부모와 통화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도록 사전 공모한 정황, 영농회장이나 부녀회장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으려 사전 모의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조합탈퇴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일 6시간에 걸쳐 노조원들을 불법도청한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농협중앙회와 광양농협을 18일 광주지검 고소하고, 광주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광양농협 간부가 직원에게 녹음기를 전달하며 녹음과 사진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양농협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동의 없이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노조의 불법 행위를 증거 자료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 부모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노조 탈퇴 강요는 없었고, 마을별 영농회장과 모의한 사실도 없다"며 "다만 노조 파업에 대비해 계약직 직원 채용에 관해 언급한 사실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양농협 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빛고을 나눔장터 북적 '제13회 빛고을 나눔장터'가 15일 오전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시민, 기업, 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헌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이날 행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익금은 자율 기부해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쓰여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co.kr

광주·전남 아동학대 4년새 11배 급증

아동학대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검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4년새 11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점차 감소, 지난해에는 13.7%에 그쳤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광주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는 167건이었다. 연말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인데도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수치(182건)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 중 29건을 기소(구속 2명, 불구속 21명, 약식 6명), 기소율은 17.4%에 불과했다. 반면 혐의 없음(20건), 기소유예(16건) 등 불기소 처분이 38건이었고, 기소 중지 8건, 이송 11건이었다. 미제로 남은 사건도 28건에 달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를 보면 2012년 16건에서 2013년 24건, 2014년 65건, 2015년 18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2년간 각각 170.8%, 180% 폭증한 것이다.

■ 광주지검 아동학대범죄 발생 현황

같은 기간 기소율은 2012년 31.3%(5건), 2013년 41.7%(10건) 늘었다가 2014년 20%(13건)로 비율이 절반이상 줄었다. 지난해에는 182건 중 25건으로 13.7%에 그쳤다.

박 의원은 "엄격해진 사회의식에 맞춰 온정주의가 작용하지 않는지 수사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힘없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7~19일 전남 해수면 높이·조차 최고조

전남도, 침수 피해 대비 점검·예찰 강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남지역 해수면의 높이와 조차(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 차)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해안가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5일 해안을 접한 16개 시·군에 해안가 점검 및 대처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16일 "국립해양조사원이 전남지역 해수면 높이와 조차가 지난 8월 백중사리 기간 수준을 넘어 18일 오전 10시 26분(여수)부터 오후 4시 15분(영광)까지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목포지역의 경우 해수면 높이가 17일 오후 3시 4분 499cm, 18일 오후 3시 52분 508cm, 19일 오후 4시 41분 504cm로 주의단계(475cm)를 넘어 경계단계(512cm)에 근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안 저지대 침수 발생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과 지역 자율방재단원 합동으로 현지 점검 및 예찰을 하고 침수 예상 시 안전지대로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관광객은 해안가 접근을 삼가고, 바닷가 낚시나 갯벌 조개잡이 등은 밀물 시 고립될 수 있으므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해안가 저지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해안도로 침수 등도 우려된다.

조태용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마을 앰프, 재해예경보시스템, 재난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도민들도 재난방송을 청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해 발생한다. 지구와 달, 태양이 서로 거리가 가깝고 3개의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해 조석차가 최고조에 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돈 달라" 어머니 폭행·욕설…패륜아들 징역 2년 선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빚을 갚아줄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겨누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40대 패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존속폭행·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12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어머니 A(67)씨의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만들어 오라"며 젓가락을 집어 A씨의 배를 3회 찌르는가 하면 흉기를 들어 겨누고, 이어 방문을 차례로 잠근 뒤 A씨를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5일과 7일, 10일 같은 장소에서 "1억5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A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라이터로 주방 다용도실 앞에 놓인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며 "죽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며 뒤에서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12년전부터 일정한 직업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서씨는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빚을 갚아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10년 전에도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불과 보름 사이 5회에 걸쳐 노모를 폭행·협박했다"며 "폭행·협박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패륜적이고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으며, 어머니를 향해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겨누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대낮 음주운전…신호대기 차량 추돌 '꽝'

쌍나팔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단속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간부 직원이 대낮에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곤혹.

○…1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이 전날 오후 4시50분께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결국 경찰 신분이 탄로 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 경감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A 경감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과 함께 전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374	1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21 261㎡	답	1,782,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0-1 36㎡	답	1,782,000	
	2	동소 22 208㎡	대	7,178,100	일괄매각
		동소 23 803㎡	대	7,178,100	
2016타경 596	1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산265 53752㎡[문재혁지분1/4전부.지분매각.다수분묘소재]	임야	14,781,800 14,781,8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6타경 688	1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627 1038㎡	답	78,268,600 78,268,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3,4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수목포함매각
		동소 628 3200㎡	양어장		
		동소 628-1 1190㎡	답		
		동소 630 453㎡	답		
		장흥군 장평면 평동로 607-110 72.6㎡ 제시외 주택 등 68.4㎡	양어장관리사		
2016타경 831	1	강진군 도암면 덕년리 산141 15372㎡	임야	10,606,680 10,606,680	
2016타경 5270	1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839 1983㎡[이정규지분1/2전부.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9,617,550 9,617,55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자동차,중기]					
2016타경 5362	1	사용본거지:순천시 조곡동 장대길 10 등록번호:전남02카6793 차명:굴삭기 연식:2014	중기	22,000,000 22,000,000	장흥군장흥읍사안리60-1,57-1보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6. 10. 31.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1. 7.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사무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사법보좌관 선주태